

‘728조 규모 예산안’ 與野 5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 합의

李 정부 핵심 국정과제 감액 없어
AI 지원·정책펀드·예비비 줄이고
국자원 재해복구 등에 예산 증액

與 “민생회복 의지로 지켜낸 결과”
野 “기한 내 처리 위해 대승적 합의”

여야가 총지출 728조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여야가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차기연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것은 5년 만이다.

여야는 2일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에 마지막 회동을 갖고 예산안 증·감액 규모를 확정했다. 예산안 처리 합의문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는 감액하지 않고, AI(인공지능) 지



김병기(오른쪽)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연석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에서 열린 여야원내대표회담에서 2026년도 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 정책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했다. 대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도 증액했다. 여야는 10조원 규모의 AI 예산에 대해선 2064억원을 감액하고 대통령실 특별비는 정부안을 유지

하고 운영비를 대신 1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번 예산안 합의 처리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등으로 경색된 정국에서 협치의 물꼬를 텃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회복과 미래성

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며 “이제 중요한 건 집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연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다수당이 수적인 우세를 앞세워서, 지금처럼 소수당을 전혀 배려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폭거를 일삼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민생 예산이 또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어쨌든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소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성공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선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도 필요하다”며 “양당 정치가 경색돼 온 과정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로 물꼬를 튼 것은 의미 있는 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합의는 국민

의힘으로서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야 간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한 타협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예산을 순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것이 관철된 것, 전체 예산을 증액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표현했다.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인 법인세 모든 과표 구간 인상안과 금융·보험업 수익 1조 기업 교육세 1% 부과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지만, 정부안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억원 이하 과표구간에 대한 선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하지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원상복구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교육세 인상도 국민의힘은 기업의 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민주당은 급성장한 금융·보험업 기업에 추가적으로 세수를 거둬 미래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개인정보 유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책 마련해야”

李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개인정보 보호 인식 완전히 바뀌어”
내란은 나치 전범처럼 형사처벌
정치 개입한 종교재단 해산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및 과징금 등 사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12·3 내란 사태 1년을 앞두고 ‘나치 전범’ 사례를 언급하며 내란 청산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규모가 3400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

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는 AI 등 신산업 육성 과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쿠팡 사태를 본보기로 해 향후 ‘AI 3대 강국’으로 나아갈 때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경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내란 1년을 앞두고 “지난 12월 3일에 우리 국민이 피로써 쟁취해 왔던 민주주의, 헌법 질서가 중대한 위기를 맞이했다”며 “그렇지만 국민의 집단지성이 밝혀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고문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든지, 사건조작을 해서 멸절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것에 대해선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선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나”라며 내란 극복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극복이 선행돼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부 내 설치된 ‘헌

법준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활동에 따른 공직사회 동료·불안감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미리 와서 인정하면(자수하면) 감면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숨기고 은폐하고 있는 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내란에 부역하고 수행했는데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처벌하고 단죄해야 한다”면서도 “시스템에 따라서 부하수행(附和隨行·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행동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따라가는 태도나 행동, 형법 87조 ‘내란죄’에 명시)한 경우도 많을 테니, 본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면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감면 등으로 자진신고 유도)그걸 안 하면 찾아내기도 어렵고, 나중에 발견되면 그때 또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총리께서도 신고하고 자수하고 그러면 웬만하

면 덮고 가게 (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인사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했는데, 발견돼서 형사적으로 넘기는 것은 법무부와 의논해서 원칙을 정해 공지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을 언급하며 “이는 헌법 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의 통일교 사례를 들어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특검이 통일교·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다만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정 종교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면서 “(정교분리는) 국가 운영의 상식이자, 기본이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사회가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라고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syj@

‘개인정보 유출’ 쿠팡, 과징금 1조3000억·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과방위, 쿠팡 사태 긴급현안질의
매출액 최대 3% 과징금 부과
김범석 쿠팡의장 사과 요구도

쿠팡을 이용하는 약 3370만개 계정의 이름, 주소, 현관 비밀번호, 구매내역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선 쿠팡에 과징금 1조3000억원을 부과하고 더 나아가 영업정지도 시켜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등에 책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SKT도 해킹 사고에서 2300만명의 정보가 유출돼서 과징금 1300억원을 부과받았다”며 “쿠팡은 3300만개가 유출됐고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쿠팡 매출액은 41조원이고 과징금을 최대 1조2000억원 물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과징금을 물리고 기업이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에게 “과징금

물어야 하지 않나”라고 묻자 박 대표이사는 “저희의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기본이고 이 정보만 있으면 범죄는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개보법 위반 맞지 않나. 과징금이 매출의 최대 3%다.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류제명 과기부 제2차관에 게도 “공정위에서 할 일이긴 한데, 영업정지도 전자상거래법 제32조2항을 보면 통신 판매로 재산상의 손해가 났을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며 검토 여부를 물었다. 류 제2차관은 “관계기관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박 대표이사가 아니라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 대표 이사는 김 의장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훈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김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나”라고 물었으나 박 대표이사는 “한국법원에서 벌어진 일이고 제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김 의장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길 원하고 있다”며 “그 분은 항상 뒤에 숨어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대표이사는 “제가 지금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고 한국 법인 대표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사태가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